

가속화될 전망이다. 그런데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우리나라는 무역 적자국이 되어 있다. BOP 11조 국으로서의 의무를 해제하는 대안을 정부와 국회가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현재 기획원이 추진하고 있는 OECD 가입 추진 기도를 중단시켜야 한다.

8. 수입 농축산물과 가공식품의 검역 검사 업무를 미국등 선진국 처럼 농림수산부 소관으로 통합하여 수입식품에 대하여 미국처럼 원산지 생산단계로부터 재배, 수확, 포장, 수송, 가공, 유통, 수입 단계를 모두 일관되게 감시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그리고 한국을 아직도 황색지대(Yellow Zone)로 규정하고 있는 미국정부에 대하여 이 불명예를 취소하지 않을 경우 그에 상응하는 보복조치를 경고해야 한다.

9. 대대적인 농업기반 시설 확충에 투자를 단행해야 한다. 전체 경제는 선진화를 지향하면서 농업기반은 후진국인 중국수준에도 못 미치는 농업조건으로 국내 농업생산성이 낮은 것만 탓해서도 안된다. 이와 관련하여 내년부터 작물재해보험을 정식으로 시작해야 한다. 말로만 "시험 실시" 운운하며 벌써 10년의 세월을 끌어 왔으면 이제 충분하지 않은가! 농어민 의료보험제 역시 대통령에 의해 거부된것을 다시 되살려 대폭 개선해야 한다. 현재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농어민 연금제도 역시 보사부의 사보타지로 지지부진하고 있는데 농어민의 특수성을 살려 독립 실시해야 할 것이다. 농산물 가격지지는 미국등

선진국형으로 금융, 자재공급, 유통 및 수출지원에 썩어 명실상부하게 농어민이 수혜자가 되게 개선 확충해야 한다. 농업보조는 선진국 농민이 우리 농민보다 몇배 더 받고 있음을 명심할 일이다.

10. 끝으로 농어민 단체, 농업관련 기구와 인원을 대폭 조정해야 한다. 전국의 농민수는 지난 10년사이 5백만명이나 줄어들어 이제 6백 70만이 채될까 말까인데 농협 임직원은 그동안 만여명이 늘어 왔고 새로이 중앙기구와 직급을 늘리고 있다. 또 농촌진흥공사가 새로 탄생되어 군단위까지 조직을 확대하면서 막대한 인력과 국가예산을 축내고 있다. 그리하여 농진청, 농진공, 농축수협 등 그 직원수는 정부 전체 직원수의 절반에 육박한다. 그들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를 차라리 농어민에 되돌려 복지자금으로 쓰는 것이 더 효과적일지 모른다는 일부 농어민 자생단체들의 비판에 겸허히 귀 기울여야 할 때이다. 그리고 이에 농림수산부가 주관한 도지사 간담회에서 제안된 바 있는 대통령이 직접 주관하는 『농어촌 발전 대책 위원회』를 청와대에 설치하여 이상의 모든 문제와 재원 염출방안(예: 농촌 발전세 제정)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도시 교통 문제 하나만 가지고도 대통령이 직접 그 대책 회의를 주관하는 것으로 이루어 보아 그 근본에 해당하는 『농발 대책 위원회』는 지금쯤 정부구상에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믿고 싶다.

우루과이라운드와 한국농민의 대응방향

권종대 / 전국농민회

I. 가트/우루과이 라운드에 대한 우리의 기본입장

1. 무엇이 문제인가

국제적으로는 87년부터 미국의 주도아래, 농산물 무역의 완전자유화와 각국 농업지원 정책의 감축·폐기를 목표로 추진되어온 가트의 제8차 무역교섭인 '우루과이라운드 농산물협상'이 문제이며, 국내적으로는 수입개방하기에 알맞는 농업을 만들기 위한 이른바 '농어촌발전종합대책'이 문제이다.

우리는 이들 두가지가 기본적으로하나의 입장·계획·전략 하에 추진된 것이라 본다. 즉, 세계적으로 '강자의 이데올로기'라 비판받아온 '비교우위론에 의거한 국제분업론'과 '기업농중심의 기형적인 단작화(單作化)·전문화(專門化)'가 그것이다. 이는 결국 각국에서 국가의 기간산업이어야 할 농업의 자급력을 파괴, 거대곡물다국적기업의 손아귀에 세계농업을 내맡길 것이며, 국내자원의 반민중적인 독점과 낭비 및 복합적·유기적 농업의 파괴를 가져올 것이다.

2. 가트/우루과이라운드의 성격과 기본 문제점

가트는 세계각국의 무역을 보다 자유롭게 함으로써 각국의 경제발전을 꾀하기 위한 국제조약이자, 세계무역의 현실을 이상적인 형태로 진전시키기 위한 국제교섭의 장이라고 한다. 그러나 주지하다시피 이와같은 세계경제의 '자유무역주의'를 기반으로 한 가트는 2차 세계대전 직후 지금까지 관세철폐를 목표로 하여 미국이 해외상품시장을 확대·지배해오는데 이용되어 왔다. 미국은 자국이익을 위해 주도적으로 만든 가트이지만, 지금까지 여러 수입자유화 예외조항을 설정하거나 아예 가트를 무시하는 국내 제 정책·법을 만들어, 한편으로는 자국산업을 보호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해외시장 지배를 위한 공세적 수출농업의 강화에 힘써 왔다. 미국은 현재 경쟁

력이 상실된 자국의 공업에 대해서는 이른바 '슈퍼 301조'를 통해 철저한 수입규제를 실시하고, 경쟁력이 높은(그 경쟁력도 국가의 막대한 보조금에 의한 것이지만) 농산물과 서비스산업 등에 대해서는 세계시장의 수입자유화를 추진해 왔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가트의 '자유무역'이란 강자가 제 편하는 대로 약자를 지배하는 무역임을 뜻한다.

미국 정부의 제안은 크게 세가지로 요약된다.

① 수입제한하고 있는 품목들은 자유화하여 관세로써만 보호(?)하게 하고 (비관세장벽의 '관세화'), 최종적으로는 관세사채를 폐지한다. ② 각국의 농업지원정책(농업생산증대, 농산물 가격지지, 정부에 의한 수급관리, 덤핑수출을 위한 수출보조금 지원 등)을 단계적으로 폐지한다.

③ 식품위생규제와 동식물 검역기준을 국제적으로 일률적으로만 만들어 완화시킨다.

위와같은 농업교섭의 특징과 주요 의제를 두고 볼 때 그 기본적인 문제점은 다음과 같이 집약할 수 있다.

첫째, 농업의 특수성이 완전 부정되고 있다.

둘째, 농업의 비교역적 역할을 완전 무시하고 있다.

셋째, 각국의 자율소관인 농업지원정책 마저 삭감·폐기시키려 들고 있다.

넷째, 상품위생·동식물검역 기준의 일률화(즉 완화)는 수업국의 국민생명을 파괴하는 것으로 각국 헌법에 규정되어있는 행복권·건강권·환경권을 사문화시키는 것이다.

다섯째, 우루과이라운드에서는 그동안 세계농업을 지배해온 선진다국적기업(특히 거대곡물 메이저들)의 횡포와 수탈에 대한 문제가 도외시되고, 오히려 이들의 시장지배를 더욱 심화시키는 안전에 치중되어 있다.

3. 우리의 기본입장

이상에서 살펴본 가트/우루과이라운드의 성격과

기본문제점으로 볼 때, 전국농민회총연맹을 가트/우루과이라운드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히는 바이다

① 우리는 전면수입자유화와 국내 농업지원정책의 삭감·폐기 등 한국농업 농민의 파탄과 경제발전의 자립적 토대의 붕괴 및 민족생존권의 위기를 물고을 우루과이라운드를 전면 거부한다.

② 우리는 모든 국가와 그 국민은 생존권적 기본권으로 가짐을 주장한다.

③ 우리는 모든 수입규제의 완전철폐와 각국 정책의 삭감·폐기 등을 목표로 하는 미국의 제안을 즉각 폐기할 것을 요구한다.

④ 우리는 농산물에서도 덤핑수출의 즉각 금지를 주장한다. 생산비이하의 가격으로 판매하는 덤핑수출은 현재 '비교우위론'으로 교묘히 위장, 국제농산물 무역의 가장 큰 위협이다.

⑤ 수입 농산물의 건강·안전 기준은 소비자의 건강·안전을 위해 가장 엄격히 규정되어야 한다.

Ⅱ. 농산물협상의 주요문제와 미국의 기본전략

1. 미국입장을 중심으로 한 의장초안

우루과이라운드 농업교섭에서, 그동안 수입제한 등 모든 비관세 장벽의 철폐(관세화), 국내 농업지원정책의 삭감·폐기, 수출보조금의 우선 감축, 농업의 특수성(비교역적 역할)무시 등의 주요의제를 둘러싸고 각국들이 첨예하게 대립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런데, 지난 7월부터 미국의 주장을 중심으로 하여 네덜란드 드주의장(농산물협상그룹)이 그룹내 합의도 거치지 않고 직권으로 의장초안을 제표, '협상의 기초'로 채택되기를 요구한 상황의 급진전해왔다.

현재 이 드쥬 의장초안에 대해 미국과 케언즈그룹이 적극 환영하고, 일본·한국 등은 비교역적 기능

의 무시에 반대하며, EC는 수출보조금의 감축 소급시한에 불만을 갖고 입장을 유보했다. 그외 수입개도국은 개도국 우대조치가 무역왜곡효과가 없도록 하는 것이 사실상 아무런 우대가 아니기에 반발하고 있다. 그런데 수출입국간, 선·후진국간의 입장 차이가 커지만 미국과 EC간의 정치적 절충에 의해 타결될 전망이 높다.

2. 미국내의 동향

미국의 전략이 기본적으로 5대 거대곡물 다국적기업들과 대농업자본가들, 그리고 기타 농산물수출업자들과 식품가공업자본가들의 이해를 대변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원래 제안이 세계최대의 곡물상사인 카길사의 부사장이 기초한 사실은 그 관계를 잘 증명해준다.

Ⅲ. 농산물협상에 대한 한국정부의 대응과 그 본질

일부 언론에서 지적하듯이 우루과이라운드에 대한 한국정부의 대응은 과연 '기본 대응전략의 부재(不在)'라 할 수 있겠는가? 결코 그렇지 않다. 한국정부는 치밀한(?)작전을 펴고 있다.

○첫째의 대응전략은 농민과 일반 국민에게 가트/우루과이라운드의 진상을 알리지 않는 전략이다. 지난 86년 9월 선언이후 87년부터 수십차례의 공식회의와 수십차례의 비공식회의 국제적인 관심과 논쟁, 그리고 이해당사자 농민·소비자단체·환경보호단체·노동조합들이 국제연대적 반대활동을 해왔지만 기초적인 정보 전달조차 하지 않아 왔다.

○두번째의 대응전략은 문제의 본질을 왜곡하는 전략이다. 지금까지의 농정을 근본적으로 전환, 수입저지와 가격 및 판로보장 등에 의한 농민생존권보장과 농업자급력 향상, 그리고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기는 커녕, 지금까지의 소수재벌위주의 수입개방·저농산물가격정책을 확대, 강화하기

위해 기본적인 논리를 펴고 있다.

○ 세번째의 대응전략은 미리 사전에 문제의 소지를 없애버리는 전략이다. 이것이 정부전략의 핵심이자, 미국이 전세계적으로 벌이고 있는 구조조정 전략의 일환에 속한다.

IV. 우루과이라운드에 대한 한국농민의 대응방향

1. 기본전제

첫째, 전농민·전국민의 우루과이라운드 저지투쟁을 조직화하여 미국의 전략을 폭로하고 미국의 제안을 폐기처분시키는 활동을 벌여야 한다. 예를 들면 전농민에게 활동비를 주어 방미항의단을 결성케 해 조직적인 대응을 실현시키는 것이다.

둘째, 농산물 수입에 앞장서는 국내독점재벌들을 '반민족적행위자처벌법'을 제정, 처벌해야 한다. 그래서 앞으로 농산물수입이란 말이 재벌들의 치부책에서 사라지게 하는 것이다.

셋째, 농업보호정책추진그룹들을 파악하여 이들과 국내 농민단체·소비자단체·환경보호단체와의 연대망을 형성하는데 총대진하여 미국의 세계농업지배 전략에 저항하는 전지구적 연대조직의 결성을 적극 지원한다.

넷째, 특히 미국내 가족농업자조직과 환경보호단체, 소비자단체, 교회기관 등 주요 개방반대세력들과 연방의회, 주의회 의원들의 부시정권 정책 규탄 운동을 지원한다.

다섯째, 국회에서 우루과이라운드 농산물협상 무효화 결의를 조직, 어떤 결정이 나오든 이를 거부하는 태세를 갖춘다.

여섯째, 수입개방정책이나 '농발대'와 같은 정책은 완전 폐기처분, 농산물자금도 향상계획(예: 89년 40.9% 양곡자금도→99년 80%)을 품목별로 수립, 가격 및 판로 보장정책을 전면 실시한다.

일곱째, 위와 같은 정책실천에 능력이 부족하거나

할 의사가 없으면 즉각 퇴진하고 농민생존권과 민족이익의 수호에 투철한 사람들이 온 몸을 바쳐 봉사할 수 있게 한다.

2. 우리의 농업발전 대안

이상과 같은 국가적 차원의 활동을 현정부아래서는 기대할 수 없을 것인가.

우리는 위와 같은 활동에 적극 앞장서 그야말로 '책임정치'를 다하는 민주적 민족적 정권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정권이 될때 다음과 같은 농업발전 대안을 즉각 실시하여 농업과, 국민경제와 국토환경과 민중의 생존권을 올바르게 지키고 키워가는데 매진할 것이다.

3. 전국 농민의 단결

그러면, 당면 정세에서 한국농민의 긴급한 대응과제는 무엇인가.

우리는 이를 사소한 이해나 생각의 차이를 떠나 우루과이라운드 농산물 교섭을 저지하고 농업·농민을 지켜 진정한 농업발전에 의한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실현에 이바지 하기 위해 전국농민(단체)들이 총집결하여 강력한 대오를 형성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4. 범 국민적 연대

오늘 농업·농민문제는 농민만의 문제가 아니다. 앞서 보았듯이 농업해체·농민피폐화는 바로 도시문제의 악화와 국토·환경 문제의 악화, 그리고 전국민의 식량안보 위기 및 건강·안전의 위기를 가져온다. 따라서 오늘 농업·농민문제의 해결을 위한 당면 우루과이라운드 저지에 농민의 모든 국민들도 적극 참여해야 한다. 그러나, 이는 우리 농민들이 가만히 있을 때에는 결코 거저 얻어지지 않는 과제이다. 도시소비자들의 연대가 확보되지 않으면 우리 농민들의 권익실현도 지연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범국민적 연대망 형성에도 다일층 매진해야 한다.